

‘갑원 태풍’ 불어온다

96. 9. 17

경제위기 ‘설’로 여론 장악하면서 노동측 압박 노동계 “경영잘못 노동자에 떠넘기기” 반발

대기업에 불어닥치는 갑원바람이 심상치 않다. 반면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은 국제수지 적자 폭 확대와 성장을 저하 등으로 ‘경제위기설’이 만연하자 이를 틈타 한계사업 정리, 임금총액 동결, 갑원 등 합리화조치를 속속 취해오고 있다. 특히 선경인더스트리는 지난 8월 이후 한달사이에 전직원의 1/3이 넘는 9백여명을 갑원, 커다란 갑원회오리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을 틈타 전경련과 재벌그룹 등이 내년도 총액임금 동결을 결의하고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촉구함으로써 ‘A급 갑원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고용비용구조로는 ▲고금리 ▲고지가

▲고임금 ▲고물류비 등이 꼽히고 있지만 금리와 지가, 물류비 등은 개별기업의 의지로 개선될 성질의 것도 아니며,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임금이야말로 당장 고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대기업들은 직접적인 대량해고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직원들의 불안의식을 조장,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커다란 짐이다.

따라서 재계로서는 대량해고 보다는 임금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 명예퇴직제나 연봉제, 성과급제를 활용하는 방향에서 총액을 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제가 지난해의 사무직, 관리직에서 올해는 생산직, 일

반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총액임금 동결은 기업경영상의 오류나 외적

인 비효율구조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생존권 수호의 차원에서 적극 투

쟁하겠다는”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및 노사관계에 개혁 추진에 일정한